

월/요/광/장

정찬용



사람들은 전라도를 예술의 고장이라고 한다. 대단한 예술가들을 배출한 동네이고 그 분들의 밑에서 공부한 제자들이 솜씨나 역량에서 빼어났기 때문이다. 예술 분야 전국대회에서 우리 동네 작가들이 큰 상들을 차지했다.

아니라 심심산골 어디를 가도 맛난 음식을 만날 수 있었다. 예로부터 관청 있는 곳은 음식이 좋다고 하지만, 재료와 솜씨의 빼어남이 전라도를 따라올 곳이 없었다.

예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허름한 음식점, 찻집에도 몇 점의 미술품을 걸어 놓은 것을 본 외국인들은 "역시 전라도는 예술의 고장이구나!"하고 감탄했다. 보성 회천면 당산나무 그늘 아래 여남은 명의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 소리를 하고 평하는 걸 보았는데 이분들을 '귀명창(名唱)'이라고 부른다. 가히 예술의 고장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 우리 동네다.

전라도는 음식의 고장이다. 우선 재료가 풍부했다. 넓은 앞뜰에서 오곡과 채소가, 뒷산에서 찔따라 나물이나, 서해의 빨갛고 남해의 청정해역에서 싱싱하고 값싸고 맛있는 해산물이 넘쳐나게 공급되었다. 또 조리 솜씨가 뛰어났다. 어머니들이 조물라거리면 김치건 된장국이건 산나물이건 들나물건 어찌 그리 입에 맞고 감칠맛이 나는지... 도회지의 이름 난 식당뿐만

아까지 않았을 정도로 전라도는 올곧은 고장이었다.

한데 요즘은 형편이 좋지 못하다. 우리 고장 사람으로서 문화예술계의 큰 상을 받는 이들이 가끔에 풍 나뭇이 귀해졌고 백남준, 장하나, 강동석 같은 국제적 예술가를 찾기도 힘들다.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키우자는 정책이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문화예술이 밥 먹여주냐? 그림 그리고 노래 불러서 잘 사는 사람 봤어?" 등이다.

전국의 요리솜씨는 상상 평준화되어 가는데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하향 평준화다. 서울의 맛있고 비싼 우리 음식들

들이 늘어나는 동네, 그리하여 예술인들이 숨을 쉬고 사는 동네... 그래야 미향(藝響)이다.

우리끼리도 즐기지만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맛을 자랑스럽게 제공하는 동네,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농사꾼이 가슴을 펴고 사는 동네... 그래야 미향(米響)이다. 의로운 이들과 그 자신들을 알아주고 기꺼이 보살피는 동네, 거창한 애국은 아니더라도 경우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간다고 애쓰는 사람들의 동네... 그래야 의향이다.

"하하하! 실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누가 그걸 모르나?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지껄이는가? 백주 내내 허무맹랑한 꿈에기를 늘어 놓는가?" 마다, 백일몽(白日夢)이다.

그러나 꿈꾸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일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가? 덴마크를 보아도, 네덜란드를 보아도 그러하다. 싱가포르도 앙타리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수십 년간 애를 쓴 덕분에 지상천국을 일구어 냈다. 우리도 꿈을 꾸어야 한다. 올바른 재물을 만들고, 그 재물이 예향, 미향, 의향을 밑받침하는 고장을 일구는 꿈을 꾸어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청사진을 누가 만들고 어떻게 이루어 갈까? <현대기아자동차 인재개발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藝鄉, 味鄉, 義鄉 그리고 財鄉

지면 목숨을 바쳐 지켜냈다. 몽고군이 쳐들어 왔을 때 왕은 강화도로 도망가고 쇠스랑이 든 초병(草兵)이, 왜군이 한반도를 분탕질할 때는 임금의 신의주로 몽진하고 낫으로 무장한 의병(義兵)이, 열강의 각축장이 된 때에는 죽창을 움켜 쥔 동학농민군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에 '시민군'이 맨 손으로 막아 냈다. 방방곡곡 어디나 나라 지키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 수많은 의사, 열사, 의병장을 존송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고 최고의 찬사를

자랑하는 식당 경영자나 세계 경제의 심장 뉴욕에서 수백명 주요인사들을 모아 눈과 혀를 감동시킨 사람은 다른 동네 사람이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허드렛 일하는 잡부가 되고 친일했던 이들의 자손은 평평거리고 사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들도 이제는 의향(義響)이란 말을 무슨 무슨 기념식장에서나 쓰고서 잊어버리는 상황이다.

시장길 아주머니가 전시장에 들러 작품을 감상하는 문화적 누림의 동네, 한 달에 얼마씩 떼어내 그림 한 점을 소장하는 사

시설

뒷북행정 AI 종합대책 실효성 있나

정부가 지난 10일 확산 추세에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오염된 가금류의 이동 통제와 소독 등 방역대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AI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살처분 조류가 680만마리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종합대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정부는 오염된 가금류의 이동 통제를 강화키로 했으나 방역망이 뚫리면 이미 전국적으로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전북과 전남에 머물던 AI가 수도권으로 오르내리더니 영남과 강원까지 번졌다. 한반도 전체가 'AI 감염관'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AI는 지난날 3일 전복 검제에서 발병한 이후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발병이 확인됐고 진정세에 있던 전남에서도 의심사례가 추가 보고됐다. 10일 보성의 한 농장에서는 토종닭 400마리가 폐사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재래시장 등에서의 생닭과 생오리 판매 금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허가받지 않고 도축된 가금류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애매하다. 영세 상인과 음식점 등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발병 초기부터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면 AI의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진정세에 있던 AI가 한달여만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허술한 방역과 능자대응 때문이다. 피해액도

정부는 AI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AI를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 AI가 발생하는 'AI 토착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방역체계의 재점검과 함께 인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해결 돌파구 찾은 '김대중 대교' 명칭 갈등

목포와 압해도를 잇는 연륙교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전남도가 오는 22일 개최될 연륙교의 명칭을 '김대중 대교'로 결정하면서 압해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칭 사용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발에 적국 나서고 있는 전남도는 국제적 명망이 높은 김 전 대통령의 실명을 붙여 인지도를 높여야 했을 것이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전남도가 '김대중 대교'로 명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상의한 적이 없다"며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실명이 사용될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과 논의를 거쳐 전남도에 실명 사용을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실상 실명 사용의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다. 압해도 주민들은 당초 '압해대교'라는 이름으로 다리 공사를 시작했으면서 전남도가 갑자기 명칭을 변경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김대중 대교 결사반대위원회'까지 구성해 서명운동과 도청 항의방문 등 투쟁을 벌일 정도다.

전남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총사업비 2천 124억원이 투입된 연륙교는 자은도와 압해도, 안좌도, 비금도 등을 이어주는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섬 개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남도가 주민,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공모하고 전남도지명위원회의 심의와 인터넷 홈페이지 선호도 조사를 통해 명칭을 확정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갈등이 확산되면 오히려 김 전 대통령의 명성에 상처가 될 수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김 전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 마당에 '김대중 대교'를 고집하는 것은 실책이 될 것이다. 전남도는 연륙교 개통 이전에 결단을 내려 갈등을 해소하기 바란다.

법조 칼럼

류재규



'예술이·헤진이 사건'으로 한동안 전국이 떠들썩했다.

호주와 미국은 각각 1997년과 1982년부터 캐나다의 1986년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 대상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과 정부는 각종 치안 강화 대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여기에 실종·유괴 아동의 신속한 구조와 범인 검거를 위해 4월부터 방송과 이동통신, 인터넷업체 등 18개 기관의 인프라 망을 활용해 공개 수배하는 '엠비 경보시스템'도 선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잊혀졌던 실종아동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예술이·헤진이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요란'을 떨쳐 '미봉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다.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이 마음 놓고

왜 이러한 작은 일들을 진작에 시작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뒤늦게라도 이러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다행

사회안전망 구축은 구성원 모두의 몫

거리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경찰을 비롯한 정부·자치단체·주민·학교·학부모 등 너 나 할 것이 모두 동참해야 한다.

예술이·헤진이 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이후 초등학교와 학원가 앞에는 등하교 시간마다 학부모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경찰의 예방 기능 강화에다 사회 전체 구성원이 힘을 합하고, 모래알 같은 도시공동체를 끈끈한 커뮤니티 사회로 만든다면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사회 구성구석에 범죄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이는 치안상태를 신뢰할 수 없는 학부모들의 필사적인 자구책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 유괴와 성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주택가와 놀이터·공원 등에서 유인 발생함에 따라 이곳에 대한 CCTV 설치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초등학생들 등·하교 시간이면 경찰 순찰차와 정·후문에 배치돼 경찰관이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지켜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맞벌이 및 핵가족화 등으로 보호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아동들이 위협에 노출, 강력범죄에 희생양이 되는 일이 앞으로 없길 바라며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와 경찰·자치단체·시민단체 모두가 나서주길 바란다.

또 초등학교 주변 상가에 '아동 안전지킴이 집'이 지정·운영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동 안전지킴이 집의 경우 주민과 경찰이 위급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변호사>

기고

신현주



산업사회에서 가슴 아팠던 대형 안전사고들은 지난 시대의 눈부신 성장 속에 잠재되어 있던 안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산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와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선진국 수준의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대책을 강조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지고 안전에 무감각해지기 일쑤다. 특히 5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 축제

농사용 전기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에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정책적으로 판매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저렴한 요금으로 농사용에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농사용 계량기에서 농사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문어발식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어 농촌지역 일수록 전기안전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와 대형 간판 설치현장의 크레인, 건축 공사현장의 펌프 카 등이 고압전선에 근접하

전기 안전사고 줄이려면

가 많아 안전의식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이다.

여 작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작업 전에 안전에 관련하여 안전 보호 관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농촌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기 안전사고도 예외가 아니고 전기사용이 급증하는 5~6월 농사철에 발생하곤 한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 통상 상승으로 대부분 인적이 드문 농어촌 지역에서 생계형 전선절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농어촌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도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으므로 전선절도 행위가 일어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 실제로 야간에 전주에 올라가 전선 절도 중에 감전으로 인해 추락,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농사용 전기는 사용 특성상 대부분 양수펌프이며 전주로부터 전선을 길게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전기에 대한 상식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탓에 물 묻은 손으로 양수기의 스위치나 전선을 만졌으므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전기 사용에 양자상이 하겠으며 안전을 비롯한 한·민·관도 대국민 전기안전 홍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전 전남사업본부 사업지원팀장>

자생식물 연구개발 다양한 상품화 피해아

지천으로 널려 있어 소중함을 몰랐던 자생식물이 농민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다. 겨우살이, 갈대 버들개지, 뽕딸기 등 지천에 널려있는 자생식물들이 건강식품이나 약재로 활용될 수 있는 효능이 있어서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니 반갑기 그지없다.

사위용품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미 함평군은 참포를 활용해 비누, 샴푸, 보디로션, 입욕제 등의 사위용품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또 제주도는 한라유채·산방나무에서 오일을 추출해 내는 기술로 특허를 내고 활용용 화장품 개발에 나섰다. 경남 통영시도 얼마전에 등백사에서 추출한 기름을 원료로 일반 화장품과

원래 꽃과 약초는 물론 유실수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생식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이를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약재나 건강용품 말고 관상, 음식, 화장품, 향을 이용한 정신적 치료 등 다양한 상품화를 꾀할 수 있게 활발한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하루빨리 정부 기관에서 육종을 연구하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지도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 <천강회·광주시 북구 각회동>

전화 사기 이용되는 '대포통장' 규제 법률 마련 절실

전화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화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할머니들이다. 사기범들은 이들이 평생 모은 재산과 자식들이 준 용돈 등 노후자금을 노린다.

과 금융기관에서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현금지급카드를 이용할 때는 직접 계좌이체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와줬으면 한다.

하지만 이들은 순박하다보니 자식을 사칭한 전화사기에 저항 한번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전화사기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했으면 한다. 아울러 농촌의 경우 동네방송을 통해 전화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으면 한다.

여기에 전화사기 수법이 갈수록 능숙화·대형화 돼가고 있어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중국 등 해외에서 조직을 운영한다고 한다. 이 같은 전화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전화사기범들은 대포통장을 활용해 범죄를 저지른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 대포통장을 규제할 법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해외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해외경찰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인터넷기자·jispoliceman@hanmail.net>

無等鼓

안락사(Euthanasia)는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했다.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졌다. 그대로 해석하면 '편안한 죽음' 정도다. 안락사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죽는다는 점에서 자연사나 자살, 살인 등 다른 죽음과는 유형이 다르다. 단 본인의 의사 분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살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한다.

가에서 안락사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다.

'죽음이 감히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비밀스런 죽음의 집으로 달려간다면, 그것은 죄일까.' 셰익스피어가 던진 질문이다. 셰익스피어의 질문이 아니더라도 안락사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을 도입했다. 벨기에도 뒤를 따랐다. 독일은 소극적 안락사를 '죽음이 어서의 도움'이라 규정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 오리건 주는 주민투표를 거쳐 미국 최초로 '풀어 있는 죽음이 관한 법'을 제정했다. 콜롬비아, 스위스에서는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

를 포함한 자살은 고대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주요 종교는 자살을 반종교적 행위로 취급했다. 한국 형법도 안락사 시행자를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논란은 거세다. 의료계는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허용자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완강하다.

그러나 변화의 움직임도 있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소수이지만 구미 일부 국

최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안락사를 요청한 국내 최초의 법적チャレンジ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오주승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